

“진도, 수산·에너지·문화 1번지로 집중 육성”

김영록 도지사, 해상풍력·김 산업 등 청사진 제시
민속문화예술도시 브랜드 확립·교통 인프라 확충

진도군을 대한민국 대표 ‘수산·에너지·문화 1번지’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미래 전략이 공식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김 산업, 전통문화와 관광을 축으로 한 성장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진도의 산업·정주 구조 전환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남도는 30일 진도향토문화회관 별관 전시장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희수 진도군수, 박금태 진도군의회 의장, 김인정 전남도의원, 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정책비전 투어’를 열고 지역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김희수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SK-오픈AI AI데이터센터,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전남 전 지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으로 전남의 미래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며 “진도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기회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에서 “올해 정책비전 투어의 대미를 진도에서 장식하게 돼 뜻깊다”며 “진도 김을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마

스터플랜 수립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김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와 문화 분야 비전도 함께 제시됐다. 김 지사는 “진도 앞바다에 3.6G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햇빛소독마을을 진도에서부터 확실하게 구현하겠다”며 “K-컬처의 원류인 진도를 명품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80억원을 투입해 콘텐츠 개발, 예술인력 양성,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도18호선 포산~서망간 2차로 개량 사업도 내년 2월 완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날 전남연구원은 진도의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미래 핵심 8대 비전’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시아·태평양 청정전력 허브 육성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연계 산업생태계 구축 △냉수대 활용 고품질 전복 생산 기반 조성 등 블루푸드산업 도약 △AI 접목·그린바이오 기반 농업 고부가가치화 △민속문화예술도시 브랜드 확립 △호국역사벨트 조성 등 체류형 관광거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열린 ‘진도군 정책비전 투어’ 행사에서 정책현안에 대한 토론을 주재하고 참석자들의 정책제안 및 건의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구축 △블루투어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핵심 SOC 구축 등이다. 정책현안 토론회에서는 군민들의 생활 밀착형 건의가 이어졌다. 한운정 청년정책협의회 위원회는 지방도801호선과 삼별초 유적지인 진도 용장성을 잇는 군도 구간의

노후 도로 개선을 요청했고, 주지현 의신면 사천리 사삼마을 이장은 집중호우 때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천교의 조속한 재가설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방문객 안전 확보와 지역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

후 도로 정비 사업비를 즉시 투입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교량 재가설과 소하천 정비에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복사료 선순환 자원화 시설 지원, 전복 가두리 시설 감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반 김 종자 배양시설 건립, 조도면 옥도 상수관로 설치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제기되며 진도군 미래 구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이 대통령 “공공기관, 지역경제 기여방안 점검하라”

청와대 국무회의서 지시…강도 높은 개혁안 등 주문
지방이전·재배치 강조…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 주면 기업 이전 가속화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여 방안 점검을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당부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그것도 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지방 재배치도 포함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 재배치 문제를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다룰 것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여 방안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체크해 봐달라”며 전폭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예로 들어 “주말이

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지역에) 이전한 기업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방안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운용자산을 배분할 때 해당 지역 내 운용회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면 (회사들이) 다 이사 갈 것 같다.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변인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핵심은 지역 발전과 관련한 일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한 구조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요 ‘저 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

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다른 지도자급 인사들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동포사회와 만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예정돼 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지난달 1일 첫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박군택 의원, 5·18보상법 개정안 발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보상금 신설

더불어민주당 박군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사진)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을 규정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서울, 광주 등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났다.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됐



고,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했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의 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더 이상의 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조직 안정 + 대표 관광 BI 구축…경쟁력 강화”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 취임

광주관광공사 제2대 정재영 사장이 30일 취임했다. 정재영 선임 사장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

임기는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 광주관광공사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따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이 통합 출범한 지방공기업으로 시장과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관광공사의 비전을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관광·MICE 허브’로 제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또 “조직 안정과 함께 대표 관광 BI 구축, 주문형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양질의 국제·전국 행사 유치 등 3대 정책과제를 축으로 공사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역사·미식을 통합한 정체성 및 브랜드 강화, 광주 고유 자산을 결합한 시그니처 행사 기획 및 스마트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선임 사장(가운데)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

MICE 체계 구축, 수익·영향력 높은 행사 타깃팅과 도심관광·주력축제 강화, 의료관광 활성화,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및 투명 인사·평가, 재무건전성·감사 고도화 등 경영혁신, 시민 참여형 콘텐츠와 VOC 기반 만족도 향상 등 전략을 제시했다. 정 사장은 “광주관광공사 출범 후 조직 화합과 함께 광주관광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면서 “그 하나의 조직·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 일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실현하는데 광주관광공사가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양동민 기자

차기 집권여당 원내사령탑 주목

잔여 5개월 임기…박정·백혜련·한병도 등 준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30일 전직 사퇴하면서 집권여당 원내수장이 누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내년 6월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출마 준비를 해온 당내 인사는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모두 3선, 가나다순)이다. 박정여학원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8·2 정당 대회 때 정경태 대표와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로 도왔다. 제파적 성향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백 의원은 2011년 검찰 수사장이 누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내년 6월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출마 준비를 해온 당내 인사는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모두 3선, 가나다순)이다. 박정여학원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8·2 정당 대회 때 정경태 대표와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조승래 의원(3선), 이른바 1인1표제 때 정 대표와 각을 세운 이언주 최고위원(3선)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고배를 마신 4선 서영교 의원(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 의원 외에도 현재 당 사무총장인

가 5개월짜리 ‘반쪽’인 데다 원내대표의 주요 임무인 정기국회와 예산안 처리가 끝났고, 내년부터 여의도 정비가 6·3 지방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되면 원내대표의 활동 공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선 이런 이유로 경선을 치르기보다 관리형 원내대표를 사전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추대하는 형식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 투표 80%와 당원 투표 20% (의원 투표 34명에 해당)가 반영된다. 이성오 기자